

광주 남구 최근 2년 청년 4천900여명 이탈…대책 시급

만 19-39세…관련 예산 0.47% 그쳐
규모 비슷한 노인 예산은 42배 많아
신중혁 구의원 “세대 간 불평등” 지적

광주 남구의 청년층이 최근 2년간 4천900명가량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과 예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만19-39세 청년 인구 수는 4만7천500명으로, 지난 2022년(5만2천518명) 대비 4천925명(9.37%)이 감소했다.

광주 지역 나머지 4개 구의 2022년 청년 인구 수는 동구 2만9천897명, 서구 8만205명, 북구 11만6천780명, 광산구 11만3천84명이었으며 올해 4월 말 기준 동구 2만8천725명, 서구 7만3천503명, 북구 10만9천395명, 광산구 10만5천406명으로 각각 1천172명(3.92%), 6천702명(8.35%), 7천385명(6.32%), 7천678명(6.78%) 줄었다.
청년 인구 감소의 이유는 정주 여건과 일자리 환경 등이 복합 작용해 어느 하나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남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청년 정책과 투입 예산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돼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남구가 국·시·구비를 포함해 올해 편성한 예산은 현재까지 6천58억원으로, 청년 정책 사업 24건에 70억6천600만원이 소요된다.
이 중 42억원이 ‘백운광장 도시 재생 어울림센터’ 조성비여서 정책에 쓰이는 예산은 28억6천600만원에 그친다. 이는 올해 예산의 0.47% 수준이다.
반면 동구는 올해 예산 4천62억5천38만원 중 12%에 달하는 48억9천만원을 청년 정책에 투입해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곳은 6천750억3천100만원 중 257억6천740만2천원을 투입한 서구(3.96%)였다.

올해 예산이 1조원 안팎인 북구와 광산구는 각각 113억7천100만원과 67억4천288만7천원을 배분해 비율은 1.09%, 0.68% 정도로 산출됐다.
남구의 예산 편성이 세대별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옴므 호’로 대표되는 노인 세대를 위한 정책 수는 24건으로 청년과 같지만, 예산은 1천218억원으로 42배 이상 차이 나사다.
이와 관련, 신중혁 남구의원은 최근 열린 제3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기준 남구 인구 중 노인은 4만5천409명, 청년은 4만7천455명”이라며 세대 간 예산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감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청년들은 남구를 떠나고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남구가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정책과 예산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예산 편성에 어려움은 있지만, 내년 완공될 백운광장 어울림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다양한 청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남구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뜨거운 도심을 식혀라!’ 한낮 최고 기온이 31도를 넘으며 더운 날씨를 보인 2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중앙선 도로에 설치된 클린로드가 열을 내뿜는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차들 사이로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히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 ‘노쇼 사기’ 129건·피해액 20억 육박

군인·교정·소방공무원 사칭 많아
경찰, 24명 입건…이중 3명 구속

올해 들어 광주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피해액이 2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접수된 ‘노쇼 사기’ 피해 건수는 129건이다.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이들이 물품 또는 먹거리를 주문한 후 다른 업체의 상품을 대리 구매하면 한꺼번에 비용을 결제하겠다는 수법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칭 대상은 군인·교정·소방 공무원 순으로 많았는데, 초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지난 4월 이후에는 특정 정당 관계자를 칭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르자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전담수사팀을 편성, 집중 수사에 나섰고 현재까지 사기와 전자금융범죄·전기통신사법법 위반 등 혐의의 24명을 입건했고 3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사기 전화를 거는 해외 거점 콜센터

팀, 국제전화를 국내에서 건 것처럼 꾸며주는 교환팀, 피해금 세탁팀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몇 건인지 아직 명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경찰은 노쇼 사기와 관련해 피의자 4명을 추가로 특정,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른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경제 회복 방안 모색 본격화

오늘 용역 착수 보고회

국토교통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선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24일 개최한다.
이번 용역은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공항 내 상업 시설과 항공기 취급업체, 지역 관광 업체 등은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수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항공 사고는 운송 차질을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특별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5·18부상자회 회원 ‘사문서위조’ 혐의 피소

단체 명의 직인 무단 사용

5·18부상자회 한 회원이 단체 명의 직인을 무단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규연 전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등 집행부 4명은 지난 20일 회원 A씨를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단체 명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체 명의 직인은 회장 또는 회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상임부회장만 사용할 수 있는데, 별다른 위임 절차 없이 사용했고 이로 인해 고소인 4명의 등기가 말소돼 해임 처분됐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피고소인 등을 상대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5·18부상자회는 지난 14일 중앙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 전 다른 후보와 담합한 의혹을 받는 조 전 회장 등 4명을 해임 처분했다. /주성학 기자

광주 아파트서 깊이·너비 1.5m 싱크홀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23일 서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7분께 쌍촌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깊이·너비 약 15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차 중이던 SUV 차량의 뒷바퀴가 함몰 부위에 빠졌으나, 사고 당시 차량 탑승자는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은 서구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현장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민 통행을 제한하는 등 1차 안전 조치를 했으며, 주차된 차량은 크레인을 이용해 현장에서 안전하게 옮겨졌다. /주성학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를번호
220603-중-139779